

민주당,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지역정가 '들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30곳 가까운 선거구를 전략공천지로 지정키로 해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를 위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계파 나눠 먹기'나 '낙하산 공천' 등의 부작용도 커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 열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29곳 가량을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백해련 대변인은 "상대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자치구청장·기초단위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제한했다.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29개 선거구 이내로,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 이내로, 광주·전

광주1곳·전남3곳 등 최대4곳 전략지 예상

"정치적 소수 배려 vs 나눠먹기-낙하산" 찬반

남 통틀어 최대 4곳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현지 표리미업이 사라진 곳이 많고 컷오프 가능성이 큰 곳도 포함돼 있어 5개 자치구 대부분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은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휘말려 무공산이 된 해남, 무안, 보성 등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위원회의 선거구 심사가 우선 이뤄진 뒤 당 대표가 시도당위원회와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고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치면 된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20% 범위내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작업으로 전략공천 범위가 기존 광역단체장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으로 까지 확대된 셈이다.

전략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지역정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3월2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나온 얘기여서 반발하거나 동의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입지자인 A씨는 "일론적으로는 전략공천에 부정하진 않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경쟁하되 가산점을 주는 여성특구가 보다 합리적이고 판단된다"며 "오랜 기간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의 당혹스런 입장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B씨는 "특정 인사 심기, 특정 계파 나눠먹기가 이뤄질 경우 공천 사유화 논란이 일 수 있고 공천 반발에 따른 당내 분란으로 자칫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전략공천으로 정치적 불신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의견

도 적잖다. 일각에서는 "광주는 5개 기초단체장 모두 입지자 층이 두텁고 스펙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도 많이 굳이 일방적 전략공천이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찬성론도 적잖다.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정치인 C씨는 "1995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에서 정·청·공·교는 물론이고 한 명의 여성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지체돼 왔다"며 "국내 정치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당에서 여성정치인은 배려의 대상이 아닌 초대의 대상으로 여길 때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군수 입지자 D씨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코앞이고 당내 경선전에는 이미 불운 불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략공천 특구 등을 투명하게 지정,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리 선당후사리지만,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도 넉넉히 감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주춘성 기자



Photo漫評

북한 다루듯이...

자유한국당이 세졌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5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각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나란히 내발은 밀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를 기다리면서 나란히 대화했다. 이들의 말은 농담조였지만, 뼈가 있었다. 이번 회동은 이날 오전 10시 5분에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의정각에서 만나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 의원은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우원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도착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기쁨의 악수를 나누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시 9분에 국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부랴부랴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스시스



우원식



장세균



우원식

갯벌·장성 필암서원 등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남도, 문화재청에 제출

전남도는 장성 필암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과 신안·순천·보성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건립된 9개 서원으로 구성됐다.

장성 필암서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경북 영주 소수서원, 경남 함양 남계서원, 경북 경주 옥산서원, 경북 안동 도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경북 안동 병산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충남 논산 돈암서원이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5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다. 심사 결과 반려되면서 2016년 4월 자진해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아 유산구역을 재조정하고 9개 서원의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

을 거쳐 다시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필암서원국가 사적 제242호)은 1590년 건립됐다. 평지에 세워진 한국 서원 건축의 대표적 사례로 서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1510~1560년)를 제향하는 사액서원(국가 공인서원)이면서 중앙과 연결된 정치활동 거점으로서 특징을 지닌 곳이다.

'한국의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 갯벌인 신안, 보성·순천 갯벌,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총 4곳으로 구성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했다.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형식 검토를 거친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 1510~1560)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인 장성 필암서원

뒤, 올해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각각의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심사를 거쳐 2019년 7월께 개최되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의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12번째, 전남에서는 2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서남해안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2번째, 전남에서 첫 번째 세계자연유산이 된다.

김정환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광주광역시 GWANGJU CITY